

# 韓-中 경제협력 ‘수평구조’ 전환·‘한한령 해제’ 물꼬 주목

## 李 대통령, 3박4일 中 국민 방문

시진핑 주석 APEC 방문 대한 답방  
오늘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일정 예정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4일간 중국 국민 방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중 협력 심화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 참모진과 함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이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열 2위와 3위인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후 첫



국민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공식 일정으로 재중국 한국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들과 교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민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6일에는자오러지 전인대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

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분야의 양국 창업가들을 만난다.

이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양

국이 공유하는 역사를 기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 심화 및 한한령(限韓令) 해제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는 한미 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한중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다면, 현재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으로 구도

가 달라져서다. 이로써 한중 간은 ‘보완’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됐고, 이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의 영역을 발굴해야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한한령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서해 문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대화 채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변화된 경제 구조에 맞춰 공급망과 문화 콘텐츠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野, 연초부터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强대치’

與 오는 8일 2차종합특검 처리 예정  
통일교 특검엔 신천지 수사대상 포함

野 “지선까지 내란몰이 지속 술수  
통일교-與 정교유착 은폐 수사도”

여야가 연초부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 데 모은 2차 종합특검과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강도 높은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하게 통과를 반발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안 처리를 노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22일 이석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2차 종합특검안에 따르면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운용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수사하고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안을 새해 통

과사키는 첫번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음에도 한번 더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려는 여당의 술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이 통일교의 주요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잡자기 끼워넣는 것은 ‘물타기’일 뿐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민주당안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안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제3자 기관 추천’이라고 포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번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7일 전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

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국회 의장개선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당연히 신천지를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법원행정처를 포기하는 모양새인데,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종교단체(신천지)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외에도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 ‘공천 현금’ 의혹 일파만파… 野, 지지율 ‘20%대’ 박스권

양당,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악재 타파, 쇄신안 모색 나서

6·3지방선거를 5개월 여 남긴 가운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지난 지선 당시 공천 현금 수수 및 공천 관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서 탈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의 공천현금 의혹이 터져나오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당의 공천 시스템을 비롯해 당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면서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하여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

조를 다 할 것이다. 경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번에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겠다.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선 당에서 철저히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후보는 공천현금 수수 의혹을 두고 “그게 형사기소가 된다든지,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사실이면)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4일 원내대표 직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당에서 가장 강하게 대응을 했다”며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강한 조치이고, 윤리심판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집권여당에 악재가 터졌음에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며 내부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제1야당임에도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주에 발표 예정인 당 쇄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의원, 광역단체장,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중도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쇄신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소장파 및 개혁론자들은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게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당의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후 “우리 당의 지금 모습으로 지방선거는 도전해보나 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당의 공천현금 수수 의혹의 뒷배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태홍 기자